

전매광장

최영태

전남도 명예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망명, 납치와 살해 위기, 연금, 감옥 생활, 사형 선고, 두 차례의 대선 패배, 정계 은퇴와 복귀 등 보통 사람으로서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이 시련의 과정에서 그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열혈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혹은 무릅쓰고 여의도 광장에 모인 백만 인파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직 ‘파’나 ‘빠’라는 말은 출현하지 않았지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가장 열성적인 ‘김파’가 출현한 셈이다. 필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문빠’ 경멸적 용어 출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1년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출세가 아닌 가치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은 부산에 남아 계속 낙선의 기록을 남겼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노무현을 가리켜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며 그의 지지자를 자처했다. 소위 ‘노파’ (노사모)는 이렇게 인간 노무현을 좋아하고 그의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든 정치팬덤이었다.

에세이



탁현수

수필가·문학박사

고향 선운사의 동백은 품위 있는 자태로 내 마음에 들어앉아 있다. 잎이 차지할 수 있는 푸르름의 여백을 한껏 내어주고 최소한의 공간만을 감금하게 지켜내는 핏빛의 꽃잎들. 상흔(傷痕) 하나 입지 않은 순결한 몸으로 툭 떨어져 놓는 꽃송이를 받쳐 들고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국화가 누님 같은 꽃이라고 노래했는데, 동백이 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3월의 누나 유관순을 닮았다고 늘 생각했다.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던 날, 온몸에 세월을 엮은 동백 울타리에 내심 반가웠다. 긴 기다림으로 한 해를 보내고 드디어 터트린 꽃망울을 대할 때의 그 실망감이란... 잊은잘 보이지도 않고 빨강, 분홍, 흰빛의 커다란 꽃송

독지광장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해 통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생계형 오토바이’인 배달용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확보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를 ‘차’인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어 음식 배달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더불어 배달용 오토바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배달용 오토바이는 신속한 배달을 위해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및 중앙선을 침범하

‘김파·노파·문파·이파’와 팬덤정치

민주당 내에는 여러 차례 낙선의 경험을 가진 김대중을 향해 대통령 불가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무현은 심지어 대통령이 된 후까지도 변방인(outsider)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김파’와 ‘노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조직적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들은 각각 두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성공적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었지 결코 배타적 호위 무사들이 아니었다.

이런 아름다운 팬덤정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질됐다. 본래 ‘노파’를 출발점으로 했던 문재인 지지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문 대통령과 그의 주변 인사들을 비판하면 즉각적으로 적폐세력, 국민의힘 첩자 등 온갖 모욕적인 용어를 동원해 입을 봉쇄하고 문자폭탄으로 위협했다. 이 공격의 대상에는 어제의 친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 배타적 팬덤정치 하에서 민주당은 어느 순간 토론 부재의 정당이 되고 말았다. ‘문빠’라는 경멸적 용어까지 출현한 배경이다. ‘조국 사태’의 속도 조절에 실패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5년 만에 정권을 내놓게 만든 것은 이런 부정적 팬덤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였다. 그는 배타적 ‘문파’들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파’는 대선 패배 후 ‘문파’보다 더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팬덤정치를 드러냈다. ‘이파’들은 대선 패배의 화풀이 대상으로 당내 경쟁자들과 그 지지자들, 이재명 비판자들, 그리고 정의당 인사들을 선택했다. 그들을 향해 배신자, 수박, 국민의힘 첩자 등 온갖 모욕적인 용

어들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합리적 토론은 불가능하다. 지자체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국민 50% 이상이 반대했던 검수완박법을 위장탈당까지 감행하며 통과시킨 것은 그 단적인 사례였다.

지난 대선에서 0.73% 패배의 원인을 찾는다면 아마 100가지도 넘을 것이다. 그런데 ‘이파’들은 0.73% 패배의 원인 제공자를 주로 이낙연 총리 지지자, 당내 온건파, 정의당 등 소수파에서만 찾으려 한다. 굳이 패배의 원인을 찾는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이재명 후보 자신이 범한 실점이 더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비겁한 셈법이 아닐 수 없다.

‘덧셈정치’ DJ·노무현의 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야 세력의 지속적 수혈과 DJP 연대 등 끊임없이 덧셈 정치를 추구했다. 1997년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김대중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자 그의 지지자들은 입조심에 들어갔다. 혹시라도 상대 진영을 자극하여 역풍을 불러일으킬까 염려해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내 경쟁자들에게 장관 등 요직을 할애하며 통합정치를 추구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에 연정까지 제안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이 진정으로 당과 자신의 성공을 바란다면 배타적 팬덤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연대와 통합, 민생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이파’들은 0.73%의 패배에서 가지치기와 뺄셈 정치가 아니라 포용과 덧셈 정치의 교훈을 발견하기 바란다. 그게 민주당과 민주 진보진영이 자랑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이다.

개량종 유감(遺憾)

이들이 상여 꽃처럼 나불거렸다. 아무리 봐도 마음속에 간직된 동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어디 꽃에 한하겠는가. 주먹만 한 딸기, 여러 유전자들 결합해 만들었다는 국적 불명의 과일들, 심지어 가족이나 물고기들까지도 토종은 이미 보기 힘들어졌다.

내 고향은 수박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 명성으로 대도시에 팔려 팔려 올라가 현지에서는 맛조차 보기 어렵다. 평소 그 수박 맛에 대해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도리질을 친다. 내 어린 시절의 산(山) 수박을 먹어보지 못해서라고. 야산으로 이어진 산자락에 한 길쭉 구덩이를 파고 씨를 묻어 두면 나뭇가지와 풀포기들을 열기설기 부여잡으며 열매들이 열렸다. 거무스름한 갈껍질에 손만 스쳐도 짝짝 갈라지던 그 시원하고 다디달던 맛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커서 들기조차 힘든 요즈음 고향 수박은 박과 수박 묘목을 접붙여 키운 것들이다. 첫맛엔 무척 단 것처럼 느껴지지만 껍질 쪽으로 갈수록 비릿한 박 냄새에 속까지 니글거린다.

내 고향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지마다 연구단지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신품종 개량을 위

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량이라는 것은 기존 하는 것에 새로운 것을 적용하여 더욱 좋게 하는 것이다. 한데 좋게 한다는 의미의 기준이 생물체에는 단정 지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듯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여러 ‘게놈지도’가 완성되면서 신의 영역쯤으로만 알고 있던 생체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다. 질병에까지 응용하고 있다니 새롭게 펼쳐질 세상에 대해 기대가 큰 것만은 사실이지만, 자꾸 염려가 앞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업적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기업에서는 농민들의 씨앗 통가지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고 한다. 식물의 생태순환 구조를 조작해 단 1회만 생장하고 씨앗의 구실을 못 하게 한 것이다.

우리 산천에 뿌리틀 내린 것들은 고유의 생명성과 처음 생긴 모습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자연은 해치지 않으면 스스로 서로에게 알맞은 모습으로 진화하며 어우러져 살아간다. 인간 역시 그 일월에 불과하다.

어떤 일이트 손리를 어길 때는 무거운 책임감은 물론 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이륜차 법규위반 근절하자

고 역주행을 감행하는 위험한 일들을 자행한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선정해 홍보활동과 법규위반자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6조(고유주 등의 의

무), 제159조(배달 종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처벌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신유철 보성경찰서 경무계장 겸감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朴 哲 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 善 男		편집국장 姜 聲 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월간국	(062) 720-1007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회부	(062) 720-105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시·도 상생 발전 한결같이 나아가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을 민선 8기 신규 상생과제로 도출했다. 시·도는 지난주 상생발전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규 협력과제 11건을 확정했다. 오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논의 안건, 의제 등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신규 협력과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유지, 탄소중립·에너지대 전환 기후동맹 선언 등이다. 28일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기존 공동 협력과제 30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 시·도가 이번에 발굴한 신규 협력과제 11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수차례 회동해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협

력 분위기가 민선 8기 초기부터 이어져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하기를 바란다.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상생하려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예기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겼으면 한다.

최근 잘 나가던 대구·경북의 협력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대구와 경북은 일찍이 행정통합을 위한 조치에 발 빠르게 움직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를 담당하던 관련 사무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던 행정통합 작업이 중단됐음을 의미한다. 행정통합 작업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했지만 실제 무산돼 이행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실감케 한다. 광주와 전남도 이번 상생 신규과제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설정했다. 이뿐 아니라 여러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감안할 때 충돌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만큼 끝까지 지혜롭게 대응해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고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 취소하라

정부가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다.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후 실종됐다. 그의 업적을 인정해 훈장을 추서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구상권 청구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김홍빈 대장은 지난해 7월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됐다. 하산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종됐고 구조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했다. 구조작업에 나선 정부가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했으나 끝내 김 대장을 찾지 못했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이었다. 정부는 김 대장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했다.

그런데 외교부가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했다. 사고 당시 외교부가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가 청

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을 들어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에 비용을 청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국외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국회의원들과 체육인들이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청구한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김경만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향자 의원이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시 체육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에 구상권 취소를 요구했다.

고 김홍빈 대장의 등반은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 열 손가락 없이 산에 올랐던 불굴의 도전정신은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이제라도 외교부는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정부 세법 개정, 지역 현안해결 기대

기지사첩



오선우

정치부 기자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21일 발표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1주택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기조는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안겼다. 구성지구에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솔라시도 선도 주택단지(600세대)가 중과세 정책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솔라시도가 골프를 비롯한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실거주용 외에 별장의 성격으로 주택을 활용하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서 1,600건의 사전청약의 향서가 접수됐음에도 실수요자는 급감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정주 여건도 열악하고 정부 지원마저 반토막인 곳에 중과세까지 부담해가며 임지를 옮길 기업과 개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원활한 분양과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 중과세를 빨리 손봐야 한다.

거대 야당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마당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야 간 협의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텅 빈 주택 천지에 낮에만 반짝 바쁘다가 밤에는 유명도시로 변하는 실패한 혁신도시 꼴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사람을 잡아야 기업이 살고, 지역이 살고, 솔라시도가 산다.